


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">보 도 자 료</div>				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1.9.29.(수)	

책 임 자	금융위 은행과장 김 연 준(02-2100-2950)	담 당 자	윤동욱 서기관(02-2100-2951) 송용민 사무관(02-2100-2953)
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(02-2100-2950)		김경문 사무관(02-2100-2824)
	금감원 감독총괄국장 함 용 일(02-3145-8300)		홍석린 팀 장(02-3145-8001)

**제 목 : 유동성커버리지비율(LCR) 완화 연장('22.3월말까지) 등
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일부 연장을 통해 코로나19
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을 뒷받침하되,
질서 있는 정상화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.**

◆ 9월 29일,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「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」을 논의하였습니다.

-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, 그동안 유연화 조치가 취해진 25개 조치의 현황을 점검하고, 이 중 유연화 기간이 정해져 있는 10개 조치에 대한 연장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.

➔ 검토 결과, ①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만기연장·상환유예 등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은행, 보험, 저축은행, 여전, 상호금융 분야의 유동성 및 예대율 관련 규제는 최대 '22.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되,

② 연장 필요성이 낮은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완화 조치는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1 추진 경과 및 성과

□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'20.4월부터 「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」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.

- 금융위원회는 총 3차에 걸쳐(1차 '20.4.16, 2차 '20.8.26, 3차 '21.3.8) 규제 유연화 방안을 보고·의결하였습니다.

<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주요내용 >

자본 규제	유동성 규제	영업 규제 등
· 증안펀드 출자 자본부담 경감	· 유동성커버리지비율 한시적 완화	· 만기연장 대출 건전성분류 유지
· 은행권 국제기준 시행시기 조정	· 예대율 규제 한시적 유예	· 공시기한 등 미준수 제재 면제
· 증권사 NCR규제 한시적 완화	· 보험사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	·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
· 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	· 산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한시적 유예	·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 비율 한시적 유예

① 감독규정 9건 및 시행세칙 6건 개정, ② 법령해석 8건 및 비조치의견서 14건 시행, ③ 금융위 의결 및 방안 발표, 지침 개정 11건 등

□ 그간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①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·상환유예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고,

<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실적 ('20.4월~'21.7월) >

구 분	만기연장 <small>일시상환</small>	원금 상환유예 <small>분할상환</small>	이자 상환유예 <small>일시+분할상환</small>
은 행	135.6조 원(55.6만건)	9.8조 원(2.5만건)	775억 원(0.6만건)
제2금융권	0.8조 원(0.6만건)	0.6조 원(3.6만건)	660억 원(0.4만건)
정책금융기관	73.3조 원(25.4만건)	1.6조 원(1.7만건)	661억 원(0.5만건)
합 계	209.7조 원(81.6만건)	12.1조 원(7.8만건)	2,097억 원(1.5만건)

② 기업대출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자금흐름을 확대하는데 직·간접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.

< 금융권의 기업대출 잔액 증가 추이 > (단위 : 조원)

구 분	'18년말	'19.6말	'19년말(A)	'20.6말	'20년말	'21.6말(B)	증가액(B-A)
은 행	857.7	885.3	906.5	987.8	1,020.5	1,066.8	160.3
보 험 사	101.2	105.7	113.0	120.6	129.7	133.5	20.5
저축은행	34.1	34.6	37.2	39.2	43.2	48.9	11.7
여 전 사	43.1	46.6	51.1	53.1	57.4	65.7	14.6
상호금융	95.4	104.4	113.8	130.2	145.8	163.8	50
합 계	1,131.5	1,176.6	1,221.6	1,330.9	1,396.6	1,478.7	257.1

2 일부 조치 연장 및 질서 있는 정상화 준비

- 금융위원회는 9.29일(수) 정례회의에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(총 25개) 내 10개 기한부 조치 중 8개에 대한 기한 연장을 결정 하였습니다. [참고 2]

- ① (연장) 금융권의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·상환유예가 연장(~'21.9월 → ~'22.3월)됨에 따라, 이와 관련된 규제 유연화 조치(8개)도 최대 '22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.

< 만기연장·상환유예 관련 규제 유연화 방안 기한 연장 >

① 은행 통합 LCR 및 ② 외화 LCR 완화* : '21.9월말 → '22.3월말

* 통합 LCR 100%→85%, 외화 LCR 80%→70%로 인하

③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 : '21.12월말 → '22.3월말

* 예대율(100%) 5%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

④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* : '21.9월말 → '21.12월말

*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100→85%로 인하

⑤ 저축은행·여전사 유동성비율 적용 유예* : '21.12월말 → '22.3월말

* 유동성비율(100%) 10%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

⑥ 저축은행·상호금융 예대율 적용 유예* : '21.12월말 → '22.3월말

* 예대율(저축은행 100%, 상호금융 80~100%) 10%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

⑦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적용 유예* : '21.12월말 → '22.3월말

* 의무여신비율(30~50%) 5%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

⑧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* : '21.9월 평가 → '22.3월 평가

* 해당 평가기준일의 경영실태평가지 유동성 관련 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 적용

- ② (정상화) 만기연장·상환유예와 관련이 없으며, 조치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없는 '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* 조치(~'21.9월)'는 연장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.

*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: (자기자본의) 10% → 20%
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 : (자기자본의) 20% → 30%

- ③ (추후 검토) 산업은행에 대한 '순안정자금조달비율* 적용 유예 조치(~'22.6월)'는 기한이 남아 있어 추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.

* NSFR(Net Stable Funding Ratio): 안정자금가용금액/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≥ 100% → 80%

3 금융위원장 주요 말씀

-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,
 - 정부도 금융권의 지원역량 확충을 위해 '22년 3월까지 관련 규제의 유연화 방안을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.
 - 아울러, 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.
- 금융위원장은 '22년 3월 이후에는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의 정상화 수준, 방역·경제 상황,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 유연화 방안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며,
 - 규제 정상화시에는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시장 충격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.
 - 금융회사 또한 규제 유연화 방안이 한시적으로 실시 중인 점을 유념하고, 향후 규제 정상화에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1. 규제 유연화 방안을 연장하게 된 배경은?

- 최근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 연장(~'21.9월 → ~'22.3월)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,
 - 정부도 금융권의 지원역량 확충을 위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.
 - 아울러, 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.

2. `22년 3월 이후 규제 유연화 방안은 일시에 종료되는지?

- '22년 3월 이후에는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의 정상화 수준, 방역·경제 상황,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 유연화 방안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.
 - 규제 정상화시에는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시장 충격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.

참고 2

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(요약)

업권	세부방안	추진 현황	향후 계획
가. 자본 적정성 규제			
공통	증안펀드 출자 자본부담 경감	· 자본비율 산출시 은행·보험사·증권사 출자금에 적용되는 위험값 하향조정	조치 완료
은행	「바젤Ⅲ 최종안」 조기 시행	· '20.2분기부터 시행	조치 완료
은행	D-SIB에서 소규모지방은행 제외	· '21년도 D-SIB 선정시 소규모 지방은행(제주은행) 제외	조치 완료
은행	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 시행연기	· 시행시기를 '21년 이후로 연기	조치 완료
증권	종투사 기업대출금 위험값 하향조정	· '20년말까지 신규 취급 대출 위험값 하향 조정(0~32% → 0~16%)	기 정상화
	증권사 대출채권 위험값 하향조정	· '20년말까지 신규 취급 대출 위험값 하향 조정(100% → 0~32%)	기 정상화
	증권사 중기대출 위험값 하향조정	· (영구적으로) 중소벤처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값 하향 조정	조치 완료
지주	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	· '21.9월말까지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확대 * 자회사 → 다른 자회사 각각(자기자본의) 10% → 20% 자회사 → 다른 자회사 전체(자기자본의) 20% → 30%	정상화
나. 유동성 규제			
은행	외화 LCR 규제 한시적 완화	· '21.9월말까지 80% → 70%	적용기한 연장 '21.9월말 → '22.3월말
	통합 LCR 규제 한시적 완화	· '21.9월말까지 100% → 85%	
은행	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	· '21년말까지 5%p 완화(100→105%)	적용기한 연장 '21년말 → '22.3월말
	예대율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	· '21.9월말까지 신규 대출 가중치 하향 조정(100 → 85%)	적용기한 연장 '21.9월말 → '21년말
산은	NSFR 한시적 적용 유예	· '22.6월말까지 20%p 완화(100→80%)	추후 검토
보험	채안·증안펀드 출자목적 RP 허용	· 법령해석 발급	조치 완료
보험	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	· '21.6월말 기준 보험사 경영실태 평가 ('21.9월) 시까지 반영	적용기한 연장 '21.9월말 → '22.3월말
여전	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	· '21년말까지 10%p 완화(100→90%)	적용기한 연장 '21년말 → '22.3월말
저축	예대율(80~110%) 한시적 적용 유예	· '21년말까지 10%p 완화	적용기한 연장 '21년말 → '22.3월말
다. 자산 건전성 규제			
공통	만기연장 대출 건전성 분류 유지	· 법령해석* 안내 공문 발송 * ①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유지 가능 ② 이자수익 인식 가능	조치 완료
여전	폐업 사업자 대출 건전성 분류 개선	· 원리금 회수가능성이 충분한 경우 '요주의' 이상 분류 허용	조치 완료
라. 면책 등			
공통	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강화	· 검사·제재 규정 및 세칙 개정	조치 완료
공통	공시기한 등 미준수 제재 면제	· 비조치의견서 발급	조치 완료
보험	보험 대면채널에 TM절차 허용	· 대면채널의 설명의무 이행 및 자필 서명 대신 비대면 녹취방식 등 허용	조치 완료
여전	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	· 레버리지 한도 확대(자기자본 比 6배→8배)	조치 완료
저축	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(30~50%) 한시적 적용 유예	· '21년말까지 5%p 완화	적용기한 연장 '21년말 → '22.3월말
정책금융	적극 위기대응 인센티브 부여	· '20년 금융공공기관 평가시 수익성 지표 등 제외, 공급실적 우선 평가	조치 완료

참고 3

관계기관 담당자 연락처

담당부서	담당자 및 연락처
금융위원회 보험과	과장 이동엽, 사무관 김경찬 (02-2100-2960, 2964)
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	과장 김종훈, 사무관 김동현 (02-2100-2990, 2991)
금융위원회 시장분석과	과장 이수영, 사무관 김준수 (02-2100-2850, 2855)
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	과장 김성조, 사무관 오승준 (02-2100-2860, 2863)
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	과장 변제호, 사무관 장원석 (02-2100-2650, 2654)
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	국장 이준수, 팀장 노영후 (02-3145-8020, 8050)
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	국장 조성민, 부국장 정호석 (02-3145-8370, 8380)
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업무실	실장 박상원, 부국장 임종건 (02-3145-8350, 8360)
금융감독원 금융그룹감독실	실장 최인호, 팀장 김택주 (02-3145-8200, 8210)
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	국장 양해환, 팀장 김경수 (02-3145-7460, 7455)
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	국장 박광우, 팀장 이건필 (02-3145-6770, 6773)
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	국장 양진호, 팀장 문재희 (02-3145-7550, 7552)
금융감독원 상호금융감독실	실장 권화종, 팀장 박현섭 (02-3145-8070, 8072)
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	국장 엄일용, 팀장 곽범준 (02-3145-7920, 7928)
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	국장 이경식, 팀장 김효희 (02-3145-7580, 7617)